

통학버스 등록 꺼리는 학원차량 ‘범칙금 폭탄’ 예고

안전규정 강화 ‘세림이법’ 내일부터 본격 단속

차량도색·구조변경 비용 부담에 광주·전남 50%만 신고
지입차량 이용 영세학원 비상 속 경찰 단속 지침 혼선도

27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A아파트 상가 앞엔 ‘○○학원’, ‘○○○○ 태권도장’이라고 적힌 학원 통학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하지만 ‘○○학원’이라고 통학차량엔 어린이용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어린이 보호차량 미표시는 물론 차량 외부에 노란색으로 도색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통학차도 눈에 띄었다.

고 있다. 학원이나 체육관 등이 어린이용 좌석 안전띠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부담 때문에 통학차 개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다. 또 관련법에 따라 통학차를 개조한 뒤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운행해야 하지만 일부 학원들은 아직까지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배정 운행하고 있다. 어린이 차량 정차 시 세림이법에 대한 운전자 준수 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통학차 신고율 저조=27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경찰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총 2267대 중 88.5%인 2007대다. 전남은 3184대 중 91.8%

■ ‘세림이법’ 위반 주요 단속 내용 (단위: 원)

위반행위	처분 대상	과태료
통학버스 미신고	운영자	30만
좌석안전띠 미착용	운영자	6만
안전교육 미이수	운영자·운전자	8만

■ 범칙금 항목

위반행위	범칙금		
	승합	승용	별점
어린이 승·하차 미확인	13만	12만	30점
통학버스 보호차 미탑승	13만	12만	-
통학버스 앞지르기	10만	9만	30점

인 2924대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 1314대 중 1308대(99.5%) ▲일반 학원 279대 중 187대(67%) ▲체육관 226대 중 101대(44.7%) 등이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안전시설을 대부분 갖춘 반면 일반 학원이나 체육관 통학버스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지난 1월 29일 세림이법 시행 이후 7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는데도, 비용 부담을 내세워 일부 학원들이 안전 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으면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제52조) 어린이 집·학원 등에서 어린이 9명 이상이 탑승하는 통학차량은 외부에 노란색으로 도색, 어린이용 안전띠와 출입문 발판 설치, 점멸등과 후시경 등 안전기구를 부착한 뒤 경찰서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비용이 200만 원 이상 들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광주 모 학원장 김모(40)씨는 “통학차량 시설보수 및 도색을 하려면 200만 원이 넘는데, 학원 형편상 이 비용을 낼 엄두가 나지 않는다. 버티볼 때까지 버티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림이법 시행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원들의 ‘달려도 되라’ 식 행태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경찰도 헛갈려...곳곳서 혼란=상당수 학원이 운영하는 지입차량(운영자와 차량 소유주 명의가 상이)의 경우 당장, 안전사고지대에 놓여있는 형편이다.

여수 아도초등학교는 여천산단 입주 기업체가 회사 출·퇴근 버스(45인승) 5대를 직원 자녀들의 통학버스로 사용 중이

지만 차주가 기업체라 어린이 통학차 신고대상에서 제외됐고 장성 진원초도 학교장이 아닌 학부모들이 전세버스 3대를 계약하면서 신고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합기도·해동검도·국선도 등 법적으로 체육시설로 명시되지 않은 시설도 어린이들을 실어 나르면서도 의무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형편이다.

당장, 경찰은 29일부터 어린이 통학차 운전자와 학원 등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나갈 방침이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주행시 앞지르기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개정안 내용도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단속이 따른 혼란 등도 예고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명확한 단속 규정 등이 마련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복지사업 편의제공 대가 금품 받은 시의원 적발

광주시의원이 노인복지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7일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수백만원의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시의회 A의원을 입건했다.

A 의원은 지난해 광주시 동구지역 경로당 2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운영 지원 사업(4000만원)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납품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고 대가 명목으로 업체에게 4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경찰은 A 의원에 대한 수 차례의 소환 조사를 거쳐 입건키로 했다. 돈을 건넨 업체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A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

“휴대폰 요금 먼저 내면 혜택” 수익원 가로챌 30대 구속

영광경찰청은 27일 휴대전화 사용 요금을 선지급하면 블랙박스 등을 주겠다고 속여 수익원을 가로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몇달치 통화요금을 미리 결제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별정통신사 포인트를 주고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도 선물하겠다”고 속여 317명으로부터 6억5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광=이종욱기자 jylee@

달궀한 대문 뜯어 판 노숙인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남의 집 알루미늄 대문을 상습적으로 뜯어 판 60대 노숙인이 경찰서행.

○2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60)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부 북동에 사는 조모(60)씨의 단독주택 출입문에 설치된 알루미늄 재질의 대문을 뜯어 판 뒤 이를 고물상에 팔아 넘겼는데, 경찰에서 “2년 전 출소한 뒤 노숙생활을 해오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이종욱기자golee@kwangju.co.kr

광주 북구 법리해석 잘못하는 바람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취소했다 건설사에 패소

광주시 북구가 잘못된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사업 계획승인을 취소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강희)는 광주시 북구 용동 일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A건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의미를 잘못 해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건설사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적용 대상이 아닌 법을 근거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A건설사는 지난 1986년 6월 광주시 북구 용동 일대 부지(3만1966㎡)에 5층 규모 아파트 15동(650세대)을 짓겠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듬해 9월 착공신고서를 제출, 대지조성공사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이후 해당 부지가 첨단과학산업기술연구단지에 포함되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추후 1992년 11월 건설부 의견을 반영해 ‘조건부 공사중지 해제 결정 및 착공신고서 제출’ 등을 요청했다.

북구는 이 과정에서 해당 건설사가 20년 넘도록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고 A 건설사는 소송을 냈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냉방병 예방 위한 시료 채취

30일까지 지역 호텔·병원 등을 대상으로 시료채취를 할 계획이다.

광주시 북구보건소 질병관리팀 공무원들이 27일 광주시 북구 용동동 청사 옥상 냉각탑에서 급성호흡기질환인 레지오넬라증(냉방병) 예방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북구보건소는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해경, 유출량·원인 파악 못해

여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초기 대응을 결정짓는 유출량과 유출 원인 파악이 늦어지면서 적절한 초기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6일 오전

여수시 덕동동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앞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전날 1500명을 투입한 데 이어 460여명을 동원해 해안가 200m에 걸쳐 둘러싸고 있는 기름 제거 작업에 나서는 한편, 유출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

수산청 광공선 1척, 여수해경 경비정 5척의 해상 방제작업은 마무리됐지만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방제업체들은 오염된 자갈을 운반해 세척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해경은 그러나 정확한 유출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방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초동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수해경의 경우 지난해 1월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 때도 어설픈 유출량 파악 등으로 초기 방제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해경은 현재 여수박람회장 인근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던 대형선박(상선) 11척을 상대로 기름 유출 선박 추적에 나선 상태다. 여수해경은 각 상선에서 채취한 연료를

사고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와 대조, 유출 선박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유력한 용의 선박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선주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오후도 인근 바다에 있던 10t 내외 규모의 어선, 유람선, 광공선에 50여 척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펜션·찻집·식당

전원주택지, 요양(병)원 · 연수원 적합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 2-5번지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으로 연 3억이상 순수익 창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 30억원
- 매매 - 22억원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8개월후 20억까지 대출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급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전파크 빌라

- 34평 - 2013년 신축
- 5층 중 2층, 첫 입주, 정남향
- 신우APT 105동 옆, 엘리베이터
- 대출 1억 1천만원 안고
- 사정상 급매 - 1억 6천만원(8/3일까지)
- (시세/분양가 - 1억 9천만원 정도)

주인직매 H. 010-3605-5000

돈되는, 근린상가

매매 임대

현재, 뷔스 Bar 운영으로 최고 수익!

- 금호동 서광병원 맞은편, 7층중 7층 120평
- 레스토랑/레스토랑/카페/커피전문점/호프/PC방/헬스장
- 재즈바/노래홀/룸수주방/단란주점/7080/당구장 등 최적

- 매매-5억 5천만원(대출 3억 6천만원 포함) 60평 분할 매매 -3억원
- 임대-보 1억에 월 300만원 60평 분할 임대-보 5천에 월 17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